

## 목포, 220억 투자해 분양은 사실상 '0'

(세라믹 산단)

### 집중 진단 지자체 산단 개발 경쟁

#### <상> 텅빈 산단 명드는 재경

전남지역 시·군의 무분별한 산업단지 개발이 도를 넘어섰다. 전남지역 산업단지의 미분양 비율이 전국 평균의 3배에 달하지만, 여전히 조성 중이다. 분양률도 계약금만 낸 사례까지 포함하는 등 '허수'가 많다. 채무 보증, 토지 매입 약속까지 해가며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 자금을 끌어다 산단을 조성하지만 '빛잔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준공된 전남도내 산단 5곳을 정밀점검했다.

4년에서 16년의 긴 시간에 걸쳐 조성된 나주 일반산업단지, 영광 전기자동차(대마)산업단지, 광양 신금산산업단지, 화순 생물의약단지, 목포 세라믹산업단지 등이 최근 준공됐다.

그러나 준공 이후 나주일반산단을 제외한 나머지 산단의 성적표는 초라하기 짝이 없다.

표면적으로는 최저 11.1%(목포 세라믹 산단)에서 최고 87.7%(나주일반산단)까지 분양률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그 내부를 살펴보면 문제는 심각하다. 계약금만 내고 중도금 납입을 미루는 업체까지 포함해 분양률을 산정하면서 통계 자체가 부풀리기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목포 세라믹산단이 대표적이다. 지방채 98억원, 시비 122억원 등 모두 220억원이 투입된 이 산단의 실제 분양률은 '0'이다. 계약금 1억원을 낸 경상도 업체가 자금난에 시달리면서 1년 넘게 중도금을 내지 않았으나 해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산단 중앙에는 지원에 줄 기업 하나 없이 309억원짜리 세라믹산업종합지원센터만

### 시골 할머니들 푼돈 뜯는 시장 상인회 ▶6면



### 광주이고 출신 넥센 서건창 2014 프로야구 MVP ▶20면



수도권에서 영광 전기자동차산업단지로 이전한 한 업체는 최근 착공식을 연 직후 부도처리됐다. 수도권 이전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이 업체는 모두 60억원을 투자해 85명을 고용한다고 밝혔으나 지금은 철골 구조물만 남아 있다. /영광=김진수기자 jeans@

### 영광·광양·화순·목포 등 실제 분양률 부풀리기

#### 지방채·PF로 수백억 빚잔치 ... 이자도 못낼 판

##### ■ 전남도내 2010년 이후 준공 산업단지 분양률

시군	단지명	개발기간	분양률	업체 입주 및 가동 상황
나주	일반산단	1994~2010	87.7%	휴업 1곳, 경매 2곳, 미착공 6곳, 가동중 23곳
영광	전기자동차산단	2008~2013	55.5%	휴업 및 부도 2곳, 경매 1곳, 착공 2곳, 설계 3곳, 가동중 6곳, 21곳 투자 보류
광양	신금산단	2008~2012	54.6%	8곳 입주
화순	생물의약단지	2006~2011	54.4%	연구기관 3곳, 기업 5곳 입주
목포	세라믹산단	2009~2013	11.1%	1개 기업 계약금 1억원 내고 나머지 9억원 미납

5년째 텅그리니 서 있다. 지난 2009년부터 세라믹산단에 220억원을 투자했으나 고작 1억원의 수익을 거뒀다. 민간기업이라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다.

민간자본 1677억원, 도·군비 45억원이 투입된 영광 전기자동차산단은 35개 업체가 분양협약을 체결했다. 분양률은 58%에 이르는 것으로 돼 있지만 실상은 다르다. 최대 기업인 (주)에코넥스가 주식사기로 휴업 상태에 있는 등 실제 가동중인 업체는 분양계약을 맺은 35곳 가운데 6곳에 불과하다. 계약금만 내놓고 추가 투자를 미루는 업체들이 상당수다. 착공 후 부도처리되는 수도권 이전기업이나 가동 몇 달 만에 문을 닫는 업체도 있다.

그나마 가동 기업도 일감 부족, 구인난, 편의시설 부족 등을 호소하고 있다. 영광군은 산단 조성 과정에서 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에 10억원을 투자했을 뿐이지만, 문제는 다른 곳에서 터졌다. 수도권 이전 기업 6

곳에 국비 76억4121만2000원을 포함해 96억2168만2000원, 군내 투자기업 9곳에 41억367만1000원 등 산단 내 기업들에게 무려 137억2355만3000원을 지급한 것이다.

지원금이나 보조금을 받은 업체 가운데 2곳이 휴업 또는 부도처리, 1곳은 경매 처분되면서 투자만큼 일자리 창출이나 지역 경제 기여 등 성과를 내고 있는 곳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영광 전기자동차산단처럼 민간자본이 조성한 광양 신금산단 역시 분양률이 54.6%에서 정체되고 있다. 금융기관 PF(프로젝트 파이낸싱) 540억원 포함, 1020억원이 투입된 이 산단의 투자 건설업체는 모두 부도처리됐다. 특수목적법인인 신금산단개발(주)이 아직 갚지 못한 235억원의 이자(6.5%)를 내며 버티고 있으나 높은 분양가(3.3m당 98만7000원)로 인해 추가 분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절반이 조금 넘는 54.4%의 분양률을 보

이고 있는 화순 의료생물단지에는 수도권 사업비 등 군비 538억8500만원이 투입됐다. 현재 이 산단을 분양해 얻은 수익은 218억5000만원(투자 대비 40.55%)으로, 분양률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연구기관인 (재)전남생물산업진흥원 생물의약연구원, 화순군이 20억원을 출자한 화순한약재유통(주)을 제외하고 입주기업은 (주)녹십자 등 4곳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반면 20년 전인 1994년부터 조성이 들어간 나주일반산단만은 비교적 높은 87.7%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다.

조성중인 산단의 분양률도 '허수'가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대표적으로 나주혁신산단의 경우 선분양됐다고 발표한 9만 6000㎡는 현재 나주시와 법정분쟁중인 이전 사업자가 계약금을 지불한 면적이다.

전남도내 각 시·군은 이처럼 산단 분양률이 저조한데도 나주 혁신산단 등 15개 산단을 조성중이며, 광양 세풍산단 등 3곳은 착공을 준비중이다. 또 고흥 도양산단 등 4개 산단은 사업시행자를 모집하고 있다.

/유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 공간 한빛원전 2019년이면 '포화'

#### 영구처분 앞서 중간저장 필요... 영광 주민들 "추가시설 용납 못해"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를 영구처분하기 위한 시설을 2055년 전후로 세워야 한다는 의견이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원회)에서 제시됐다.

하지만 영광 한빛원전의 경우 영구처분시설 건립 훨씬 이전인 2019년이면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 공간이 포화상태에 이르는 만큼, 원전 내에 별도의 중간저장시설이 만들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 추가 핵시설 건설에 반대하는 영광지역 주민들과 마찰이 예상된다.

공론화위원회는 18일 공론화 사업 경과 브리핑에서 2055년을 전후로 사용후핵연료 영구처분 시설이 완료돼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사용후핵연료 관리를 위한 의제'를 발표했다.

사용후핵연료는 원료가 됐던 우라늄 외에 제논·스트론튬·세슘·플루토늄 등과 같은 맹독성 방사성물질이 포함되고, 원자로에서 핵분열을 거친 후에도 다량의 방사선과 뜨거운 열을 방출하게 돼 인체에 노출될 경우 치명적이다.

사용후핵연료 영구처분은 지하 500미터 이하의 깊은 곳에 폐연료봉을 묻어, 인간의 생활권에서 완전히 격리시키는 조치다. 현재 원전에서 나온 사용후핵연

료는 각 원전 부지 내에 있는 임시저장 시설에 담겨 있는데, 한빛원전의 경우 2019년부터 포화상태에 이르게 돼 영구처분시설 건설 전까지 원전 가동 중단을 하지 않는 이상 추가적인 저장 시설이 필요하다.

공론화위원회는 현재 폐연료봉을 보관 중인 원전 내 임시저장 시설의 용량을 높이기 위해 '조밀저장시설' 설치가 이뤄지고 이에 따라 임시저장 시설의 포화 시점을 늦출 수 있다고 밝혔다.

영구처분 시설 가동 시점은 2055년으로 설정한 데 대해 공론화위원회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결과 시운전 기간 등을 따져볼 때 2050~2060년 사이에는 건립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시범운영 기간을 감안하면 사용후핵연료 영구처분 시설 건설공사는 2045년에는 시작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영광 한빛원전환경안전감사위원회 관계자는 "영광에는 어떠한 핵시설도 추가 건설해서는 안 된다는 게 지역 주민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사용후핵연료 보관을 위해 또 다시 한빛원전 시설 확충에 나선다면 차라리 원전 가동을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철호기자 khk@kwangju.co.kr

### 국민안전처 장관 박인용·공정위원장 정재찬 내정

#### 장차관급 11명 인사

#### 광주·전남 출신 없어

박근혜 대통령은 18일 '세월호 참사'에 따른 재난안전체계 강화와 공직개혁 등을 위해 신설한 장관급 국민안전처 장관에 박인용(62·경기) 전 합참차장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는 정재찬(58·경북) 전 공정거래위 부위원장을 각각 내정했다.

<관련기사 3면>  
또 차관급인 인사혁신처장에는 민간 출신의 이근면(62·서울) 삼성광통신 경영고문을 내정, 주목을 끌었다. 대통령 비서실 교육문화수석비서관에는 김성열(54·서울) 숙명여대 영어영문학과 교수가 내정됐다.

국민안전처 차관에는 이성호(60·충북) 안전행정부 제2차관, 국민안전처 중



박인용 장관

양소방본부장에는 조송래(57·경북) 소방방재청 차장,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장에는 홍의태(54·전북) 경찰청 차장이 각각 발탁됐다.

또 통일부 차관으로는 황부기(55·경북) 통일부 기획조정실장, 행정자치부 차관 자리에는 정재근(53·충남)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실장, 방위사업청장에는 장명진(62·충남) 국방과학연구소 전문연구원,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는 김인수(50·경기) 국민권익위 기획조정실장이 각각 내정됐다.

하지만, 이날 발표된 11명 중 광주·전남 출신은 단 한 명도 없어 아쉬움을 남겼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나의 취향에 맞춘 단 하나를 찾다.  
The New A-Class

